

전남도, SOC·현안 내년 국고 확보 '구슬땀'

정부부지사·실국장, 기재부에 기반시설·현안 반영 건의 농림해양 분야·산업생태계 조성·에타 조기통과 등 요청

정부의 긴축 재정 방침으로 내년 국비 확보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전남도가 SOC와 주요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국고 확보를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전남도는 8일 "서울과 세종에서 박창환 정부부지사를 비롯한 실·국장들이 기획재정부 예산실 국·과장들을 잇따라 만나 내년 정부예산안에 주요 기반시설(SOC) 사업과 도정 현



박창환 전남도 정부부지사가 8일 오후 세종시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실 관계자를 만나 경전선(광주송정-순천) 전철화, 호남고속도로 2단계(광주송정-목포), 남해안 철도 건설, 국도 77호선 신안 압해-해남 화원, 여수 화태-백야 건설 등 전남도 SOC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내년도 국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안을 반드시 반영해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영록 전남지사도 추경호 경제부총리 면담,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과 국민의힘 예산정책협의회, 기재부 예산실·국장 면담, 국회 의장 및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면담에서 내년도 국비 지원을 줄기차게 건의했다.

이날 전남도가 건의한 주요 기반시설 사업은 ▲경전선(광주송정-순천) 전철화 ▲호남고속철도 2단계(광주송정-목포) ▲광주-완도 고속도로 1단계(광주-강진) ▲남해안(보성-임성) 철도 건설 ▲국도 77호선 신안 압해-해남 화원과 여수 화태-백야 건설 등이다.

신규 주요 국비사업 중 농림해양사업으로는 ▲조선·해양구조물 스마트 운송관리 플랫폼 구축 ▲광양항(여천) 묘도수도 항로 직선화사업 ▲서남해안 생태정원도시 조성 ▲파속체소연구소 구축 ▲농산업 빅데이터센터(허브) 구축 ▲참조기양식산업화센터 건립 등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산업생태계 조성 사업의 경우 ▲차세대 그리드센터 구축 ▲전기차 전주기 탄소중립 환경관리체계 구축 ▲그린수소 에너지 섬 조성 타당성연구용역 ▲우주발사체 사이언스 파크 조성 ▲산단형초임계 CO2발전산업화 지원센터 구축 ▲국가 노후화학산단 정밀안전진단 시범사업 ▲탄소중립에듀센터 건립 등을 강조했다.

문화·관광사업으로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전남 설립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준비(선도) 사업 ▲국립 마한역사문화센터 건립 타당성용역 ▲마한 역사문화권 유적조사·정비사업 ▲가고 싶은 섬 조성 등의 반영을 요청했다.

이 밖에 예비타당성조사 조기 통과를 건의한 사업으로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조성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국립 심뇌혈관연구소 설립 ▲나주 에너지국가산단 조성 등의 지원을 요구했다. 9일과 11일에도 박 부지사와 도 실·국장들은 기재부를 또 다시 방문하는 등 정부예산안이 확정될 때까지 국비 지원의 당위성을 추가로 설명할 계획이다. /김재정기자

민주당, '해외 도피' 최영환 前광주시의원 제명

박미정 시의원, 당직 자격정지 1개월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청탁성 공품 수수 혐의를 받고 필리핀으로 출국해 잠적한 최영환 전 광주시의원을 '제명'했다.

또한 전직 보좌관으로부터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피소된 민주당 소속 박미정 광주시의원은 당직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윤리심판원은 8일 오전 10시부터 3시간 가량 회의를 갖고 징계를 의결했다. 윤리심판원에 따르면 최 전 의원은 제8대 시의원 시절 사립 유치원을 공립으로 전환하는 사업(매입형

유치원)과 관련, 특정 유치원이 선정되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 의원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 6월 2일 필리핀으로 도피해 잠적했으며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상태다.

윤리심판원은 "제8대 광주시의원 신분으로 저지른 비위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고 해외에 체류 중으로 수배가 내려진 상태임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전직 보좌관으로부터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피소된 박미정 시의원은 경정계인 당직 자격정지 1개월을 받았다.

재선인 박 의원은 제8대 광주시의원 시절 보좌진 채용 과정에서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을 위반해 당의 품위를 훼손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윤리심판원은 설명했다.

광주시의회도 박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오는 22일 열린 제309회 임시회에서 징계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또 20대 대선 기간 당내에 존재하지 않는 기구의 직책을 사칭해 사기 범죄로 구속 재판 중인 당원 A씨도 제명했다.

민주당 광주시당 관계자는 "당사자와 상대방의 소명을 듣고 윤리심판원의 규정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며 "시당의 징계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1주일 이내에 중앙당 윤리심판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선강기자

민주 광주시당 위원장 후보자 선출 절차 돌입

11일 등록 마감...평당원 출마 경선 여부 관심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8일 시당위원장 후보자 등록을 공고하고 본격 선출 절차에 들어갔다.

최근 평당원들이 광주·전남 정치개혁연대를 구성하고 출마 의사를 밝힌 가운데 실제 경선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민주당 광주시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시당위원장 후보자 등록을 공고했다.

등록 자격은 공직선거법에 의한 피선거권이 있고 권리당원으로 광주시당 당적을 보유한 자로 지난해 12월31일까지 입당한 당원 중 지난해 7월 1일부터 지난 6월30일까지 당비를 6회 이상 납부해야 한다.

등록은 오는 1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광주시당 선관위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접수해야 하며 1천500만원의 기탁금도 납부해야 한다.

2인 이상의 후보가 등록할 경우 경선거탁금은 별도 책정한다. 경선거탁금은 전체 경선비용의 1

/n이며 선거관리·홍보 등 재반 비용이 포함된다. 그동안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은 국회의원 간 합의를 거쳐 단일 후보를 선출해 왔다.

하지만 지난 6일 '평당원들이 국민과 당원이 주도하는 민주정치를 실현하겠다'며 발기인대회를 갖고 출범한 광주·전남 정치개혁연대에서 2명이 출마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경선이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시당위원장은 권리당원 50%, 전국 대의원 50%를 합산해 선출된다. 권리당원은 온라인과 ARS 투표를 병행할 수 있고 전국 대의원은 현장 투표해야 한다.

민주당 광주시당 관계자는 "2인 이상이 시당위원장 후보로 등록할 경우 경선을 치러야 한다. 11일 후보 등록 마감에 끝나면 상황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평당원도 시당위원장이 될 수 있다. 규정과 절차에 따라 원만하게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선강기자

한숙경 도의원, 광양경제청 조합회의 위원 선임

전남도의회 한숙경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7·사진)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제12대 조합회의 위원으로 선임됐다. 한 의원은 최근 열린 제129회 조합회의에 참석해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당부사항을 전했다.

조합위원으로는 전남도의원 3명을 포함한 전남 7명과 경남 3명, 산업통상자원부 1명 등 총 11명이 참여하고 있다.

한 의원은 "광양만권 발전을 염원하는 지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신산업·문화관광이 어우러진 역동적인 국제무역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해 활동하겠다"며 "미래 신성장 기업 유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청년들이 지역 내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재정기자

"전남 환경교육 컨트롤타워 부재 개선을"

최선국 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장, 대책 모색

전남도의 2050탄소중립 계획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환경교육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최선국 보건복지환경위원장(더불어민주당·목포1·사진)은 최근 이범우 전남도 기후생태과장, 김광춘 자연환경연수원장 등 환경교육 관계자들과 환경교육 실태 점검 간담회를 가졌다.

최 위원장은 "전남도 환경교육의 문제점은 컨트롤타워가 없어 탄소중립과 같은 도정 주요 시책의 통합교육이 어렵다는 점"이라며 "지역환경교육센터도 없어 환경교육에 대한 도민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전문가 양성과 활용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로 환경교육 개선안을 마련해 전남도 기후생태과에 전달할 계획이다.

환경교육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전남도, 도교육청, 학교, 환경교육센터,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환경교육정책 통합·조정 기구 구성, 환경교육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할 광역환경교육센터 지정, 22개 시·군 환경교육 조례 제정, 지역환경교육센터 설립 등이다.

최선국 위원장은 "탄소중립 실현은 모든 도민이 기후위기에 공감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행동으로 옮겨갈 때 가능하다"며 "환경교육이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책 대안과 조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정기자

Panasonic

인제나 사랑받는 안마의자
87년
선진안마기술집약체

파나소닉 안마의자 출시

EP-MAC9

전문 마사지사의 손놀림을 완벽하게 재현한 섬세함을 구현하다!

파나소닉 안마의자만의 풍부한 테크닉을 갖춘 4가지 자동 마사지 프로그램과 긴장을 풀어주는 무중력 스윙 모드로 일상의 지친 심신을 마사지로 빠르게 회복

파나소닉프라자 062)522-2000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24 (임동5거리) 직영서비스센터